

간판시대 끝, 이젠 능력 시대... 지방대 출신 CEO 다수 등장

유니코써치, 1000대기업 CEO 분석

SKY大 2019년부터 30% 미만으로... 63,64년생 최다 활약
서울대 출신 14.1%로 가장 많지만... 최근 감소세 기록중

〈1면에서 계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000대 기업 CEO 조사대상자 1439명 중 서울대 출신은 203명(14.1%)으로 조사됐다. 고려대 출신 CEO는 110명(7.6%), 연세대 출신은 96명(6.7%)으로 확인됐다. 주목할 대목은 1000대기업 내 SKY 대학 출신 CEO 비중은 올해 28.4%(409명)로 지난해 29.3%보다 0.9%p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59.7%와 비교해 보면 31.3%p 이상 감소했다.



SKY 대학 외에도 △한양대(77명) △성균관대(47명) △부산대(37명) △중앙대(35명) △서강대(33명) △한국외국어대(31명) △경북대(26명) △경희대(25명) △영남대(23명) △건국대(20명) 등이 20명 이상 CEO를 다수 배출시킨 대학군에 이름이 올랐다. 지방소재 대학 중에서는 동아대(15명), 전남대(10명), 경남대·충북대(각 8명), 전북대(7명) 등에서 1000대 기업 CEO가 다수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조사된 200명이 이상의 서울대 출신

경영자 중에서는 1964년생이 22명으로 최다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한승환 삼성물산 사장(정치학), 구현모 KT 사장(산업공학),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법학), 류경표 한진 대표이사(경영학),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화학),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경제학),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축산학) 등은 올해 58세로 동갑내기면서 서울대를 나온 동문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세계에 탈(脫)학벌 바람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주요 대기업들.

서울대 출신 CEO 중 최고령자는 고은희 대림통상 회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경영자인 고 회장은 1934년생이다. 최연소 CEO는 1980년생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이사(경영학)와 정경문 롯데정밀화학 대표이사(화학),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경제학), 박길연 하림 대표이사(축산학) 등은 올해 58세로 동갑내기면서 서울대를 나온 동문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었다.

하이닉스 부회장, 정성원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등은 동갑내기면서 고려대 경영학대 출신으로 조사됐다.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생명공학), 이인덕 CJ푸드빌 대표이사(축산학),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사회학) 등도 올해 59세이면서 고려대를 나온 최고경영자 그룹에 속했다. 연세대도 서울대와 동일하게 1964년생

CEO가 10명으로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과 정항기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같은 대학 경영학과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불어불문학), 최정호 LIX인터내셔널 대표이사(지질학) 등도 1964년생이면서 연세대를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김혜양 유니코써치 대표는 “과거에는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많지 않다 보니 출신 학교와 같은 스펙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지만 최근 산업계는 융합이 대세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단순히 어느 학교 출신인지 하는 1차원적 기준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중소기업계 “차기정부, 대기업과 中企 양극화 해소해야”

43.8% “코로나 이후 더욱 심해져”... 대책수위 '불공정거래 개선' 脫 탄소 정책·인력난 심화 등 중소기업 부담 악화로 원인 지목
혁신 전환·인프라 구축 등 차기 정부 중소기업 지원방안 요구

탈 탄소 정책·인력난 심화·비대면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위기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혁신 전환, 성장 촉진,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경주 힐튼호텔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해법’을 제시했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진 서강대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사업체 수의 99.9%, 고용의 82.7%를 차지하며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6.6%의 성장률로 대기업(5.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장기적으로 성장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이익과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0.3%의 대기업이 총 영업이익의 전체 영업이익의 57.3%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2배 차이가 나며 영업이익은 7.6배 수준이다.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3.3배 많았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8%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악화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양극화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 ‘불공정 거래 개선’이 지목됐다.

중소기업의 68.1%는 원자재 생산에 있어 대기업이 가격을 일방 통보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계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은 86.2%에 달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은 “전속거래구조와 같은 불공정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의욕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단결해 거래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른 ESG·탈탄소도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6.1%로 일본(19.5%), EU(14%), 미국(10.6%)에 비해 높다. 이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업종, 석탄 발전 비중이 높아 환경 규제 시 개별 기업의 부담이 크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지난해 최초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 감소로 인하여 2028년에는 신규 인력이 수요보다 38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력을 확보하기 힘든 중소기업이 인력난 피해를 겪어가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생산이 1961년 82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400배 이상 증가하고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 대국



중소기업중앙회가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원자력발전소 전경. 박미나 기자

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은 양극화 심화, 비대면 확대, 탄소중립 강화, 생산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위기의식과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플랫폼·비대면 확산 등 패러다임 변화 대응책이 논의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부상하면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 회피 성향이 심화하고 있다. 구매 제품·방식·경로 등의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유통·판로 기회가 증가한 반면 비용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중소기업 디지털 성숙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국 중 6위 수준이며 대부분의 스마트공장(73.5%)이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성장을 이끄는 경제구조인 일명 ‘중대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야 한다”며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혁신하고 지원정책 다양화와 함께 대통령 직속 중소벤처위원회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노동 규제 개선·납품단가 제값 받기·탄소중립·ESG 지원 등 혁신 전환 △협동조합·전통기업·소상공인 성장·신시장·사업 기회 공정 기반 성장 인프라 구축·위기 대응 및 복지 체계 확충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지역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는 차기 정부에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펼쳐질 수 있도록 5대 분야 56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은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안’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며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20대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반영되고 향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中企 스마트제조 현실적 대안은 협동로봇”

대다수, 시스템 호환성 부족으로 제조 추진 난관
공장 구축 30% 불과... 78%는 여전히 기초 단계

무협 분석 보고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생산성 향상과 함께 직원들의 안전까지 고려해야하는 시대를 맞아 ‘협동 로봇’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협협회 국제무협통상연구원(무협)이 17일 발표한 ‘협동 로봇: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의 시작점’에 따르면 현재 많은 국내 중소기업은 시스템 호환성 부족,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10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6만7000개 중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1만9799개로 약 30% 수준이며 그 중에서도 71.9%(1만5423개)는 여전히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의 효율성과 유연성 달성, 그리고 스마트 제조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협동 로봇’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일종이지만 전통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센스 등 방호장치 없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성이 뛰어나다. 또한 크기가 작아 공정 재배치가 용이하고 조작성도 편리해 제품 설계와 공

정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비용 또한 전통 산업용 로봇의 25~30% 수준(대당 2~6000만 원)으로 저렴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는 데 적합하다.

보고서는 협동 로봇은 범용성이 뛰어나고 의료·교육·문화 등 서비스업 등 타 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협동 로봇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가 비중이 높은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자체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모터, 감속기, 센서 등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산화율은 41% 수준에 불과하다.

이준명 무협 수석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정책적 변화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제조의 무인화·자동화 흐름까지 국내 제조환경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가 잇따르고 있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들에게는 협동 로봇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클라우드를 통해 로봇의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동형 서비스형 로봇 기반의 협동 로봇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면서 협동 로봇의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많은 국내 중소기업이 시스템 호환성 부족,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스마트 제조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